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1. 행사 개요

- 목 적 : 언론윤리강령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지향점 모색
- 일 시 : 2022년 10월 26일(수) 10:30~12:00
- 장 소 : 20층 국제회의장
- 진행방식 : 현장진행, 유튜브 생중계

2. 세부 일정

시간	세부 내용	비고
○ 사회: 김영욱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10:30 ~ 10:35 (5분)	개회사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0:35 ~ 11:15 (40분)	[발제1]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내용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인 인식 -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패널토론 -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임자·논설위원 - 민수미 쿠키뉴스 기자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임주현 KBS 기자	
11:50 ~ 12:00 (1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1]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내용

발제자: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윤리강령의 의의 및 기능)

- (이상적인 언론윤리 실천) '강령'으로서 행동지침 혹은 실천지침의 역할
- (언론인의 윤리적 사고 행위 강화) 뉴스 가치와 규범 제시, 언론사의 이상, 목적, 책임 명시
시민들에게 언론 활동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역할
- (현대 언론사회 위기 극복) 언론사 자체 윤리규범 확립 → 저널리즘 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

○ (언론사별 언론윤리강령 비교분석_형식)

① 명칭 및 규범 구조의 면 비교

- (용어, 개념 통일된 기준 미비) 언론사별 다양한 주체, 독자적 운영 → 통일·일관된 기준 X
예) '윤리규범, 윤리강령, 보도준칙, 편집강령...' 혹은 '실천요강, 시행세칙, 가이드라인...'
- (용례에 따른 용어사용 필요) 특정 직역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 규정 → 용어 정리 필요

② 윤리강령 담당 및 심사기구 설치 규정 유무

- (언론사별 강령 심사기구 존부) 언론윤리강령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 그러나 독립된 공간은 거의 없음. 어렵게 규정을 찾더라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언론사별 언론윤리강령 비교분석_내용)

① 공통적 규정 내용

- ('언론의 자유수호'가치적 규정) 대부분 언론사가 규정. 그러나 가치적 규정 선언이 과연 규정의 성격에 부합했는지 검토 필요. 반면, KBS, MBC 등 방송사의 경우 가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면이 있음
- ('취재보도윤리·직업윤리·권리보호·피해구제(최소화)·언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 취재보도윤리 :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취재원 보호, 평론의 원칙 공통적으로 제시
- 직업윤리 : 이해충돌 배제, 금품 및 향응 거부, 취재정보 공익적 활용 명시
- 권리보호 : 취재대상의 명예, 사생활 보호, 인격권 침해 금지, 저작권 침해금지
- 피해구제 : 반론권보장, 오보 정정
- 언론인으로서 품위유지와 자긍심 규정
- (문제점)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업데이트 필요. 또한 추상적임

② 고유한 내용 비교분석

- (개별 언론사 공적 역할과 기능 규정) "언론이 사회적 공기관. 국민의 알권리 충족해야 한다. 사회 비판 감시기능 수행해야 한다."를 내용 규범에 포함한 것은 검토 필요
- (차별금지 규정) 다수 언론사가 성별, 지역, 학력,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제시. 언론윤리규범에 드러난 차별성 인식이 다른 사회적 규정과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폐쇄적이라는 평가

- (사내민주주의 규정) 경향, 한겨레신문에서 명시. 언론사 사내민주주의 정의에 따라 달리 파악 가능
- (정치적·종교적 중립, 정치활동 금지 규정) 4군데 언론사에서 확인됨. 보도의 객관성을 위함.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중요하므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포함될 필요
- (언론사별 윤리 규정의 수범자 표현문구) 규정의 수범자 주체의 범위 명확히 해야 규정의 실효성 확보 가능. 임직원, 기자, 사원, 우리 등으로 규정된 현재의 수범자 범위 확대/수정 필요
뉴욕타임스는 수범자 범위가 '기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취재와 논설부서는 물론 편집자와 연구원 등 모든 구성원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언론사별 언론윤리강령_운영 비교분석)

- (윤리강령 주기적 교육실행 유무) 윤리규정의 실효성 → '주기적 교육' 시행되어야
언론윤리 규정 속에 '교육' 규정 포함한 언론사는 TBC, 부산일보사 뿐
- (윤리위원회 규정의 구체성) 윤리위원회 심사 담당기구 규정 필요. 윤리위원회의 권한, 절차진행 등 규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언론윤리규정의 실효성 평가에 어려움 있음
- (언론윤리규정 개정 규정 유무) 언론윤리규정 내용은 현실적 타당성을 지녀야. 미디어 환경, 취재 및 보도의 현장 빠른 변화 포함 필요 → 이에 따른 빈번한 개정작업은 필수과정

○ (언론윤리강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검토) 언론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으로 국가개입 어려움 → 기업위원회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경영합리화 필요. 예컨대 보도 관련 법적 소송은 언론사에게 큰 리스크 → 내부통제 구조에 따라 주기적 개선 담당부서 설치, 책임자 선임, 환경 조성, 평가, 정보 소통, 재평가, 기준 반영의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취재보도 실행지침 구체화) 실행의 강제성 확보 제도 도입 - 대응적 규정, 면책규정 동시 마련
- (언론윤리강령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 공시) 윤리규정 제정 언론사 →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제안

[발제2]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인 인식

발제자: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인 인식)

- (언론윤리강령 정보 및 운영방식) 소속 언론사 윤리강령 정보, 관심 부족. 언론윤리강령 대외 비공개 및 사내 인트라넷 공유 →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접근 어려움
- (언론윤리강령의 중요성)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 신뢰를 담보하고 저널리즘 원칙과 책무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가장 중요한 조항은 언론자유와 공정정보도라는 답변 있었음. 한편 언론기업의 입장에서 윤리강령 준수에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답변도 있었음
- (언론윤리강령 공개와 단일 언론윤리강령) 윤리강령 공개에 대한 인식은 18명 중 14명 찬성. 윤리의식 경각심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고, 기본 원칙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 기대 때문이라는 의견. 반대는 윤리강령이 공개되면 외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 단일한 언론윤리강령 제정에 대해서는 18명 중 10명 반대. 반대이유는 다양한 관점 존재, 미디어 특징에 따라 규모와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

○ (언론윤리강령 교육에 대한 인식)

- (언론윤리강령 현행 교육 시스템) 현직 언론인은 거의 “선배로부터 배웠다”는 의견. 도제식 교육은 일관성이 없음. 특정 개인의 신념이 윤리 교육의 방향과 정도에 좌우될 우려가 있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수습기자 당시 교육이 거의 대부분.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교육을 선명히 기억하는 언론인들이 있었음
- (언론윤리강령 교육 필요성 인식) 언론윤리강령 교육 필요성 적극 공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제안(온라인 교육). 기자 스스로 윤리의식 각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 필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SNS 통한 취재, 과거에 없던 취재형태에 대한 주의점 등 교육 반영 제안. 소수의견으로는 법적 문제 대처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는 의견

○ (언론윤리강령 개선에 대한 인식)

- (언론윤리강령 개선사항)
 - 추상적인 강령 → 구체적·세부적 사례 지침 제시
 - 온라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언론윤리강령 필요
 - 체크리스트 활용 (코로나 초기, 체크리스트 반드시 체크 시 출입가능 제도처럼 보도정보시스템 열 때마다 체크 가능하도록 → 강제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사내 시스템 운영 (ex. 고충처리인, 저널리즘책임위원회 등)
- (언론윤리강령 교육 시스템 개선사항) 효율성 높은 사례별 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대다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식 교육 도입 제안.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통한 참여도 제고. 바쁜 기자의 특성상 온라인 교육 필요(특히, K-MOOC 같은 의무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 제안). 직급별/데스킹 관리자 교육의 필요. 한편, 교육 시스템 운영 시 비용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규모 언론사의 경우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 있었음
- (기타의견)
 - 언론실천적 언론윤리강령으로서의 개선
 - 대외적으로 큰 문제 발생했을 때만 인사위원회 가동되는 보여주기식 조치 개선 필요
 - 언론윤리강령 위반 시 제재할 규정 마련
 - 한국 언론 신뢰회복을 위해 언론윤리강령 필요
 - 국내 언론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윤리강령 준수의 어려움

○ (언론윤리강령 개선 및 실용적 활용 방안 제안)

- (1) 기자들의 윤리강령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적 공개와 체크리스트 도입
- (2) 실천적 적용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윤리강령 및 교육 내용 개선
- (4) 정기적 교육으로 도제식 교육의 단점 보완
- (5) 구체적 사례 교육의 필요
- (6) 연차별 또는 직급별 언론윤리 교육의 도입
- (7) 언론사별 윤리위원회 가동

[패널토론]

○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국내 언론사 윤리강령 제정 실태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감시 비판 활동 척도가 낮은 경우 → 신뢰도 낮다고 인식. 따라서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경우 언론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1년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언론계 내에서 자율규제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음. 평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함. 언론윤리강령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언론 활동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의 의미. 따라서 이를 공지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언론윤리 교육 관련하여 일정비율의 교육을 이수하면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또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에 관련, 외국에서는 25불 이상의 향응을 받는 경우 담당 부서에 보고 후 도네이션센터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KBS의 경우 13조에 구체적 조항 명시하였음. 위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임자·논설위원

- 한겨레신문 윤리강령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행위일반에 대한 내용임.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며 각국에 한 명씩 윤리위원장이 있음. 취재보도준칙의 경우 윤리 일반보다 취재 윤리에 포커스 맞춰 취재보도 행위 위반, 콘텐츠에 초점. 저널리즘책임자위원회, 저널리즘 책임자가 취재보도준칙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사이 추상적 성격의 윤리강령 외에 보다 구체적인 취재보도준칙을 제개정하고 있는 양상: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1998), SBS 방송가이드라인(1998),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2017), 한국일보 취재보도 준칙 등. 2020년 한겨레신문사의 저널리즘책임자 설립 이후, 연합뉴스의 콘텐츠책임자, KBS의 저널리즘책임자 잇따라 설립.
-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자체의 문제: 첫째, 명확성 부족. 2007년도에 만든 취재보도준칙은 전문 하나가 전부. 워싱턴포스트의 취재보도준칙은 예컨대 익명 취재원 관련, '한 기사에 익명 취재원 두 명만 허용한다'와 같이 구체적임. 한편, 한겨레신문은 '가급적 익명 취재원 인용을 삼간다'로 되어 있음. 둘째, 강제성 미비. 언론윤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명시 안 됨. 같은 징계 위반도 다양한 환경과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 판단은 달라짐
-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의 운영 미비의 문제: 첫째, 교육 부족. 언론사 입사 후 수습기자들에게 1시간 교육만 함. 데스크도 정기적 교육이 필요. 취재보도준칙 제정과정에서 탑다운(Top-down)형식은 실천 상 어려움이 있음. 바텀업(Bottom-up) 형식으로 논의하여 실천과 주인의식 더욱 강화할 필요. 둘째, 외부 공개 미흡. 관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함. 윤리강령 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비슷한 내용들임. 각 언론사는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외부 공개하여 서로 비교하며 발전하는 것이 나을 것임

○ 민수미 쿠키뉴스 기자

- 신뢰를 주는 뉴스 만들기 위해 기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사내교육을 고민했음. 또 독자에게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 → 쿠키뉴스에서 최초로 ***데스크 실명제** 실시. 현재 신중한 취재와 책임이 요구되는 기획기사와 단독기사에 적용하고 있음. 데스크가 기사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
(*데스크실명제: 기사를 취재한 기자뿐 아니라 지휘, 최종점검한 데스크의 서명을 함께 싣는 방법)
- 2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긍정적인 외부 평가(한국 언론의 대표적 윤리적 책임 사례로 인용). 기자들이 취재하는 현장에서 취재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피드백도 있었음.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로는 데스크가 더욱 꼼꼼히 기사를 체크하고, 혼자 기사를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기자들의 심적 부담 감소가 있음.
- 추가로 지난해 쿠키뉴스는 윤리강령 편집규약 개정, 기존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취재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으로 바꾸기 위해 취재보도 가이드북 제작. 취재원 보호와 취재 기자 안전, 차별금지 항목을 추가하여 사회 갈등 조장 가능성을 최소화
- 사회 흐름에 맞춰 새롭게 추가한 소셜미디어 준칙을 통해 SNS인용 보도나 기자 개인 SNS계정 운영 기준 제시. 디지털 저널리즘 부문 및 온라인 특화 기사작성, 영상 활용 등 정리. 취재보도 가이드북을 클라우드 노트 앱을 이용해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임
- 언론윤리강령의 한계는 속보, 단신의 경우 예민한 사안이라도 시간 압박으로 인해 언론윤리강령의 참고비율 급격히 감소. 기자 개개인의 윤리의 견해차이의 문제, 윤리강령이 학문으로 느껴져 기자 업무 적용에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임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언론윤리의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나 당연하지 않은 현실. 그 이유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예시로, 최근 SPC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관련 여러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됨. 그러나 언론의 윤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산업안전법 강화해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 이는 언론이 가진 특성 때문.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며 알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를 가지면서도 언론사는 사기업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함
- 윤리강령이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함. 연차가 낮은 기자도 참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윤리의식이 필요.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 소송 사건을 보면, 언론사에 “악의가 없으니, 대의를 위해 취재원에 대한 작은 피해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음. 그러나 보도의 빠른 확산으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큼. 언론사의 피해 책임의 불분명. 이에 대한 언론진흥재단의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함
- 사회적 역할 관련 언론 현장의 취재기자들이 윤리의식,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특히 달라진 미디어환경에 맞는 다양한 의제발굴 및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임주현 KBS 기자

- 사회 변화에 따라 언론인의 가치판단과 윤리강령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케이스스터디의 중요성도 생각함. 개념적 교육보다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 예컨대 작년에 한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충북 진천 임시 숙소에서 거주했음. 기자들이 망원렌즈를 통해 10대 아프간 소녀의 모습을 찍었는데, 누군지 특정되지 않기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 그러나 보도 이후 큰 논란이 되어 기사 모자이크 수정 후 업로드, 삭제 조치됨. 이후에 신문윤리위원회에도 제재를 받음. 윤리의식의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
- 데스크에 대한 언론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함. KBS는 인식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상황. 기자 개인이 지키더라도 데스크를 하는 결정권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함
-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채찍'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함께 제시해야 실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제평위, 인신위,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경우, 제평위 가산점을 주는 방식 혹은 언론재단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의 폭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재단 관련 제안사항

- 언론윤리강령 케이스 스터디 프로그램 마련
- 재단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제정 언론사 공식적으로 공개
- 윤리강령 및 취재보도준칙 제정 유무 여부로 사업 심사 등 자원책 마련
- 언론윤리 관련 학술지 또는 사례집 발간

○ 언론윤리강령 개선방안

- 임직원 기자 사원 우리 등으로 규정되어있는 현재의 수범자 범위 확대 혹은 수정 필요
- 용례에 따른 용어 정리 필요
- 정치·종교·종교 관련 내용 모든 언론사 규정에 포함 필요
- 언론윤리강령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 윤리위원회 심사 담당기구 관련 구체적 규정 필요
-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업데이트 필요
- 온라인 환경에 적용 가능한 언론윤리강령 제정 필요
- 언론 피해 사례 윤리 강령에 포함 필요

○ 언론윤리강령 활용방안

- 기자들의 윤리강령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적 공개
- 언론윤리 관련 체크리스트 도입
- 실천적 적용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윤리강령 및 교육 내용 개선
- 정기적 교육으로 도제식 교육 단점 보완
- 구체적 사례 중심의 교육
- 연차별 또는 직급별 언론윤리 교육 도입
-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식 교육 도입
-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통한 참여도 제고
-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교육시스템 마련
- 언론사별 사내 시스템 운영(윤리위원회, 저널리즘책임위원회 등)
- 교육 시스템 관련 국가 지원 필요
- 구체적 사례 확인 및 선택 가능한 시스템 마련 필요